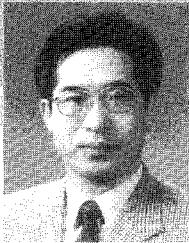


새롭게 변화되는 대학 특허



김 원 준 변리사

우리 나라의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핵심두뇌(Think tank)인 박사급 연구원의 73%를 보유한 대학은 “첨단기술 개발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기 위하여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2001.12.31)을 개정하였고,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을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으로 이전하여 특허권 등을 관리·운영하도록 2002년 6월 1일부터 산학협력과 대학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창업보육센터와 기술이전센타로 재단(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대학교수의 발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사립대학교와 지방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새롭게 변모하는 대학 특허 활성화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립대학의 기술이전센타 설립

충남대학교가 국·공립대학 중에서 최초로 “(재)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재단(법인명)”

이라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이하 “기술이전센터(Technology Transfer Center)”라 함)을 설립하여 동안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국유특허 22건을 2003년 1월 28일 이전하였다.

(재) 충남대 산학연교육연구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교수의 직무발명은 법인에 승계되며, 실시보상금(royalty) 지급은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액의 50%를 발명자(교수)에게, 10%는 발명자의 소속부서, 40%는 법인에 배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수가 퇴직한 후에도 보상금 권리는 계속 유지되며 사망시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서울대의 경우 2003년 4월 17일 오픈한 “(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을 통해서 서울대학교의 국유특허 19건을 이전한 바 있다. 특히, 서울대는 향후 ‘5년간 매년 200억원씩 투입해 2000개 특허 활용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대학교수 등 교내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 특허를 산업체에 이전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의 60%~80%는 해당 교수에게 배당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그 동안 음성적으로

제품화한 기술거래를 양자로 끌어내고 대학교 내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정비해서 선진국과 같은 기술이전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대학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교의 산학 협력 성공사례

1998년 정밀측정기기 전문벤처인 SUN프리시전을 창업해 2003년 1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서울대 박희재 교수(정밀기계과)는 주력제품 '포토스페이서(5세대 LCD용 정밀검사장비)'를 개발하고 올해 대만 LCD 업체에 9대를 수출해서 벌써 8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미 국내시장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대만과 일본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박 교수는 정밀계측 관련 특히 30건, 180여편의 기술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산업기술대의 강대인 교수(제어계측공학과)는 컴퓨터와 프린터 생산업체인 (주)아침기술에 기술지도를 하다, 학과 학생의 졸업작품을 생산라인 개선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자는 졸업과 함께 이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산업자원부 특성화 대학을 승인 받은 지 불과 4년 만에 이 대학의 취업률 100%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이 대학이 주변 공단의 1천여 업체와 '가족 회사' 협약을 맺고 대학은 기업에 비싼 실험장비를 빌려주거나 기술지원을 해 주고, 기업은 학생 실습 및 취업을 돋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좋은 결실을 맺고 있어서 산학협동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이 대학은 삼성테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3백만 화소급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 렌즈를 개발했고, 엘지텔레콤과 함께 IMT-2000용 박막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

변화되는 기술이전센타

미국·중국·일본 등 선진 각 대학 신기술의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술이전센타는 국가 산업 발전은 물론 대학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직접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이 가장 활발한 나라의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3기 중국의 전인대 상임위원 9명이 모두 공대 출신이며, 이중에서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이 청화대 출신임을 볼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중국의 최고 기술대학인 청화대는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는 청화동평(淸華同方)그룹 외에 15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한 해 약 200억위안(3조원 정도)으로 수익의 10%는 대학으로 환원되고 있다.

한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경우 1999년에 162건의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성사시켜서 4700만 달러(약 600억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다.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은 한 해 230여건의 발명신고를 접수받아 신고된 기술 중 25~40%는 특허출원 되며, 이중 50%정도는 기술 이전되는 연구개발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

대학에 특허 전문가 배치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2년 12월 23일 "대학별 명의 기업에 중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특허에 정통한 기업 경험자나 변리사 등, 특허 전문가를 2003년부터 대학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희망하는 대학을 공모하여 2003년에는 국공립대학 30개를 선택해서 인건비를 8000만 엔씩 보조하고, 특허 전문가로 하여금 대학에서 발생한 특허를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80년대 국가 예산으로 발생한 특허는 대학에 귀속시켜 기업과의 산학협력에 의해서 발명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제도를 추진하여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에서 벤처기업이 잇달아 탄생하여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었다.

국립대학의 출원인 명칭변경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인은 발명을 한 자(제 33조 : 발명자), 승계인(제 37조), 특허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자(제 38조제5항) 및 특허받을 권리를 유증에 의하여 승계한 자(제 38조제5항)이다. 법에서 정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1999.9.26. 선고 96후 825 판결)에서 “국립대학은 민사법상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배경으로 그동안 국립대학의 경우 출원인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충남대학교총장), 대한민국(서울대학교총장)”으로 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었다.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2001.12.31)의 개정을 계기로 각 대학에 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하게 되었고, 대학교마다 재단법인 등을 설립하여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 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교의 경우 경희대학교

는 학교법인 고황재단 한양대학교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로 출원하고 있다. 한편 국립대학교의 경우 기술이전센터단법인을 설립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재단법인 충남대학교산학연 교육연구재단 등의 명으로 출원하고 있다.

대학특허 지원기관 활용

대학의 기술이전센타에서 국유특허를 관리함에 따라, 국립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서 특허기술 이전으로 인한 로열티 수입금이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대학의 연구비 재창출로 이어져 대학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각 대학의 기술이전센타에 대한 지원 외에 대학의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부 산하단체인 수도권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TLO : www.tlo.or.kr)과,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기술거래소(www.kttc.or.kr)가 있다.

대학교수와 학교법인 대학의 특허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UNITEP(www.unitep.co.kr)가 있다.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리더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www.kimpotent.co.kr)

발행 2004/5

본회 가입 업체

- 회 원 명 : (주)이온맥
- 대 표 자 : 김홍배
- 가입년월일 : 2004년 3월 3일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995번지
- 전 화 번 호 : 031-949-6971/6